

공 개



의안번호	제 323 호
의 결 연 월 일	2022. 11. 9. (제 20 차)

의  
결  
사  
항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2. 11. 9.

## 1. 의결주문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다음의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20조에 따라 (주)우리은행 업무의 일부(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 업무) 정지(3월)하고, 舊 「자본시장법」 제422조에 따라 前 은행장 ○○○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문책 경고 상당)’으로 조치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부과하고자 함

- 다 음 -

### 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1)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 (2) 영업점의 ◁◁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 (가) 적합성 원칙 위반
  - (나) 적정성의 원칙 위반
  - (다) 설명확인의무 위반
  - (라)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마)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나.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가.에 따라 업무의 일부 정지 3월(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 업무)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2021.4.8.) 심의필
- 제9차 임시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2022.11.7.) 심의필

<붙임>

(주)우리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 기관에 대한 조치

#### ○ 업무의 일부\* 정지(3월\*\*)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 2022.11.10.부터 3개월 간

#### - 조치사유 : 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1)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2) 영업점의 ◁◁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가) 적합성 원칙 위반

(나) 적정성의 원칙 위반

(다) 설명확인의무 위반

(라)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마)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 법적근거 : 舊 「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적합성원칙),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제47조(설명 의무),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금융실명거래), 제5조의2(행정처분)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제53조(설명 의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나목,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8호

## □ 임직원 에 대한 조치

- 前 은행장 ○○○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문책경고 상당)”으로 조치
- 조치사유 : 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1)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舊 「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설명 의무),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제422조(임직원 에 대한 조치)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3조(설명 의무)
- 팀장 ○○○, 차장 ○○○, 부지점장 ○○○, 차장 ○○○, 차장 ○○○, 차장 ○○○, 부지점장 ○○○, 부지점장 ○○○, 부지점장 ○○○, 부지점장 ○○○, 차장 ○○○, 부지점장 ○○○, 과장 ○○○, 차장 ○○○, 부지점장 ○○○, 부지점장 ○○○, 부지점장 ○○○, 대리 ○○○, 부지점장 ○○○, 부지점장 ○○○, 과장 ○○○, 과장 ○○○, 부지점장 ○○○ 총 22명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 조치사유 : 다.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 거래), 제5조의2(행정처분)

## 2. 조치사유

### 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1) ◁◁ 사모펀드 판매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9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은 비시장성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의 만기가 단기인 경우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함에도,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하여 사모사채 펀드만기를 6개월로 결정하여 예·적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019.1월부터 판매하던 중

- 2019.2.27. ◁◁자산운용에 TRS를 제공하고 있는 ▷▷▷▷과의 미팅 등을 통해 ▷▷▷▷이 TRS 위험관리를 위하여 ◁◁ ▶▶▶▶▶▶▶▶펀드(사모사채 母펀드)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TRS 증거금 인상 및 한도축소, ◁◁ 펀드 판매중단 등을 추진하려던 동향을 파악한 것을 계기로

- 2019.3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자산운용의 사모사채 母펀드(◁◁ ▶▶▶▶▶▶▶▶ 펀드)와 무역금융 母펀드(◁◁ ♠♠♠ ♠♠♠펀드)의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 [illegible]

- ♣♣♣♣ ♣♣ 펀드의 나머지 70%가 투자하는 ◁◁ ♠♠♠ ♠♠ 펀드의 해외 무역금융 투자자산들의 LTV 및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서는 ◁◁자산운용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등 펀드운용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음
- 이에 ◆◆◆지점 등 96개 영업점에서는 2019.4.10.~2019.4.30. 기간중 설정된 ♣♣♣♣ ♣♣ 펀드 195건 413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 미설정, 투자자산의 LTV 및 보험가입여부 불투명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 ♥♥ 펀드 및 ■■■ ■■ ■■ 펀드 리스크 점검

- ① ◁◁◁◁은 수수료를 다모작한다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단기 조달/장기운영으로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인 만기 6개월의 ♥♥♥♥♥ ♥♥ 펀드를 2019.1.23. 출시하여 예·적금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였고

- 그 후 2019.2.1. ◁◁ ▶▶▶ ▶▶ ▶▶▶▶ 펀드에 100% 투자하고 만기는 1년인 ■■■-■■ ■■ 펀드를 출시하였음

【 ♥♥♥♥♥ ♥♥ 펀드 투자구조 】



- ② ◁◁◁◁은 2019.2.27. ▷▷▷▷을 통해 ◁◁ ▶▶▶ ▶▶ ▶▶▶▶ 펀드(사모사채 母펀드)가 투자하는 비시장성 자산 명세표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모사채 발행기업, 매출채권 담보대출 및 부동산 대출 취급건들을 점검한 결과,

- ◁◁자산운용의 투자자산에 대한 신용 및 담보가치 분석 프로



세스와 투자관리 프로세스가 미흡하고 신뢰성이 낮으며

【◁◁운용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관리강화 안(2019.4.4.) 내용 중 운용사 관련 부분】

추가 이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27 실사 결과 투자관리 프로세스 미흡, 신뢰성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산에 대한 신용 및 담보가치 분석 프로세스가 미흡한 수준</li> <li>- 자산별 LTV, 담보, 투자비중 및 주기적 실사자료 또한 확인 불가</li> </ul> </li> <li>• '17년에 기 판매된 무역금융 펀드도 사후관리 미흡 (5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후 주요 자산군의 임의 변경, 현황 관련 문서자료도 미확인</li> </ul> </li> </ul>	무역금융 관련 과거 투자펀드 수익률도 목표 대비 미흡 (목표 7%, 실제 4.9%, 연환산)
------------	--	--

- ◁◁▶▶▶▶▶▶▶▶▶▶ 펀드가 A등급 채권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에 중점 투자한다는 사실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나 '●●●●●, ●●●●● 벤더업체'의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안전성을 강조한 제안서 등의 설명과 달리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③ 目目目目目은 2019.3.28. ◁◁자산운용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하여 만기 6개월 상품으로 판매한 ♥♥♥♥♥ ♥♥ 펀드가 편입한 ◁◁자산운용의 사모사채 母펀드(▶▶▶▶▶▶▶▶▶▶ 펀드)가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2019.8월부터 만기도래하는 ♥♥♥♥♥ ♥♥ 펀드가 정상적으로 상환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시장심리 악화시에는 펀드런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음

【◁◁자산운용에 대한 실사보고서(2019.3.28.) 발췌】

운용현황	○ TRS (중수익스왑)을 통해 펀드 운용중 - 과의 높은 비중으로 최근 신규 딜 중단후 재개, - 추가 계약 관련 한투, 미래에셋과 한도 협의 중 ○ 8월 이후 만기자금 관리 필요 - 시장, 투자심리 악화시 만기 스케줄 및 펀드런 대응	1. 스왑계약 증권사 확대 및 분산 추진 2. 만기시 Roll 관리 및 당량 익스포저 관리
------	--	---

- ④ 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은 2019.4.5.에 2019.3월 중 점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 사모사채 펀드가 무등급 사모사채 중심으로 투자하여 신용위험이 높고 차주들의 이자지급능력도

확인이 불가능한 등 기업금융자산의 부실화가 우려되며, ◁◁ 자산운용의 자산내역 비공개로 현황파악도 어려우므로 ♥♥♥♥♥♥ 펀드를 비롯한 관련상품의 판매규모를 축소하고 기 판매 상품은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보고서를 ㅇㅇㅇ 前 부행장보에게 보고하였음

【 ◁◁운용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관리강화 안(2019.4.4.) 주요 내용 】

■ 대상펀드 현황

구분	상세 내역
투자지역	국내투자 82%, 해외투자 18%
투자영역	기업금융 34%, 부동산금융 43%, 유동성 23%
자산형태	기타 41%, FoF 33%, 부동산담보대출 21%

※ 2019. 2. 27. ( ) 과 TRS 거래시) 미팅 결과  
 ① 과 거래 금융 → 판매중단 후 리스크 점검 → 판매 재개  
 의 펀드들을 대상으로 Stress Test ( ) 포함  
 → **실패 악화 시 30% 손실 가능 (회수율 70%)**  
 단, 회수기간 장기화가 고려되지 않은 결과임  
 ② 부동산 내 지방불건 비중이 50% 수준으로 높음  
 ③ 경·공매를 통한 부실 부동산 회수경험 없음

- 설정일 \*19.1월-, 원금 5,824억, 평가 5,848억  
 - 단거래 비중 약 50%가 약 85%인 4,976억  
 - 1월 설정펀드 기준 현재 수익률 3.7% (연환산)

■ 리스크 점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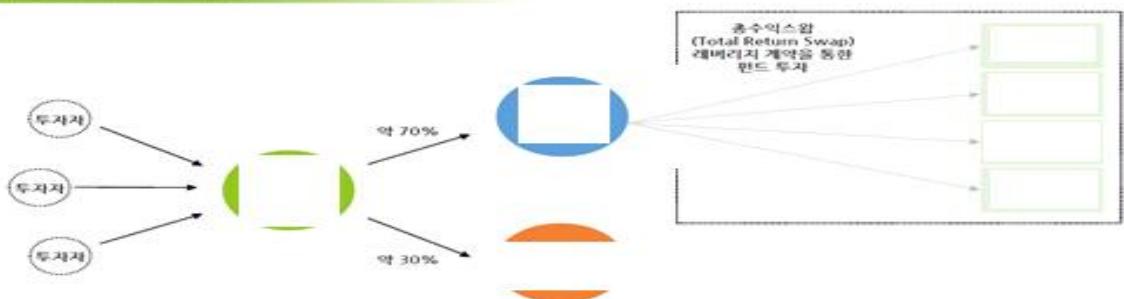
구분	
리스크 요인	①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에 부정적 영향 ② 보유한 기업금융 자산의 부실화 우려 ③ 자산내역 비공개로 현황 파악 어려움
관련 전망	•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가격 악화 - 브릿지론 등 고위험군 자산 고비중 - 경, 공매를 통한 담보처분도 지연우려 • <b>무등급 기업금융 사모사채 중심 투자</b> - 담보가치가 낮고 투자기업 신용 미흡 - 차주들의 이차지급능력 확인 불가
대응방안	○ <b>본 비뿐만 현재 상품의 판매규모 축소</b> ○ <b>기 판매상품 관련 모니터링 절차 강화</b>

(나) ♣♣♣♣ ♣♣ 펀드 리스크 점검

- ① ◁◁◁◁은 2019.3월 ◁◁ 사모사채 모펀드(◁◁ ▶▶▶ ▶▶▶ ▶▶▶ 펀드)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019.2.22.에 출시하여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 ♣♣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무역금융 모펀드(◁◁ ♠♠♠ ♠♠♠ 펀드)에 대해서도 리스크 점검을 실시하였음

【 ♣♣♣♣ ♣♣ 펀드 투자구조 】

펀드 투자 구조 예시



- ② ◀◀◀◀은 ◀◀자산운용 실사 등을 통하여 ◀◀자산운용 담당자로부터 ☸☸☸☸ ☸☸ 펀드가 약 30% 분산투자하는 것으로 설명된 ●●펀드가 설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 ☸☸☸☸ ☸☸ 펀드 요약제안서 내용 】

☸☸☸☸ 펀드 (약 70% 수준)	+	☸☸☸☸ 펀드 (약 30%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li> <li>• 글로벌 Top-Tier 무역금융 전략을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li> <li>• 약 2,000개 이상 차주에 무역금융을 제공하여 분산된 포트폴리오 추구</li> <li>• 레버리지를 스왑 계약을 활용하여 수익률 극대화 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험을 통해 안정성이 보장된 확정 매출채권을 담보로 무역금융을 직접 제공하는 펀드</li> <li>• 싱가포르 소재 무역회사가 Buyer에게 공급계약이행 완료 후 확보한 확정 매출 채권에 대하여 금융을 제공</li> <li>• 다수의 국내외 확정금리성 딜에 투자하여 안정적 성과 추구</li> </ul>

- ◀◀◀◀은 ●●펀드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 ☸☸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 중 매출채권 투자자산 액면의 100%에 대하여 S&P 기준 A- 등급 이상의 우량 보험사가 제공하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투자자산이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제안서에 이를 반영하거나 판매직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 ☸☸☸☸ ☸☸ 펀드 제안서 중 ●●펀드 내용 】

Ⅲ. 투자 대상 펀드 ②	펀드	
펀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소재 무역회사</li> <li>• 매출채권 역면가의 100%에 대하여 신용 보험을 가입해 원금 회수 안정성 제고</li> <li>• S&amp;P 기준 A- 등급 이상의 우량 보험사를 통한 신용보험을 통해 안정성 제고</li> <li>• 수입업체의 지급 능력 신용도 검증에 따른 보험 제공</li> </ul>		가 수입업체에게 확보한 확정 매출 채권에 대하여 <b>당사가 독점적으로 금융을 제공</b>

- ☸☸☸☸ ☸☸ 펀드가 ●●펀드에는 투자되지 않아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무역금융 母펀드(☸☸☸☸ ☸☸ 펀드)에만 투자되고 있으므로 ☸☸☸☸ ☸☸ 펀드의 위험등급이 제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이 아니라 실제로는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상품이라는 것을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3등급으로 판매하였음

- ③ ◻◻◻◻◻◻◻는 2019.4.5. 그 동안의 리스크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 ♡♡♡ ♡♡ 펀드의 실제운용 및 투자관리 상태가 매우 불투명하고, 국가위험이 높고 실체가 불확실해 판매사 입장에서는 현황 파악 및 성과관리가 불가능하므로 판매중단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前 부행장보에게 보고하였음

【 ◁◁운용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관리강화 안(2019.4.4.) 주요 내용 】

- ① 보험가입 현황 및 LTV의 확인 불가
- ② 국가 리스크에 노출, 이벤트에 취약
- ③ 향후 성과 부진 시에도 원인 파악 불가

- 구조적으로 보험이 없으면 고위험자산
  - 본질은 저신용 기업 관련 단기대출
  - 보험현황 확인 불가 시 리스크 높음
- 아르헨티나 등 취약국 리스크도 증가
  - 아르헨 : 작년말 IMF 구제금융 신청
  - 남미, 아프리카 등 취약국 환율 불안

- 국가위험이 높고 실체 불확실, 판매 중단
- 현황 파악 및 성과관리가 실질적 불가능

【 ♡♡♡♡ ♡♡ 제안서 】

Ⅲ. 투자 대상 펀드 ①

펀드

펀드 소개

글로벌 Top-Tier 무역금융 전략을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

2000개 이상 저주매 무역금융을 제공하여 분산된 포트폴리오 추구

레버리지를 스왑 계약을 활용하여 수익률 극대화 추구



보수적인 LTV 비율

단기 대출임에도 보통 80% LTV

고정 단기 판매계약을 바탕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선정



운송 및 크레딧 보험

운송 사고, 어음 부도 등 각종 사고 대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대출 가능

사고발생 시 보험액 약 85~90% 이상 커버 가능

## (2) 영업점의 <<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에서는 2017.6.26.~2019.4.22. 기간 중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 사모펀드 등 114건 721.4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舊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확인의무 및 「자본시장법」상 설명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였음

### 【 <<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영업점) 내역 요약 】

(단위 : 개, 명, 억원)

구분	㉞ 적합성 원칙 등 위반		㉡ 적정성의 원칙 등 위반	㉢ 설명 확인 의무 위반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무자격자 투자권유	계 <sup>1)</sup>
	㉠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상향	㉦ 투자자정보 확인서 서명 누락					
점포수	14	46	1	21	36	3	82
고객수	14	61	1	24	42	8	109
계좌수	14	64	1	26	45	9	114
금액	27.7	465.8	5	125.8	247.2	27.2	721.4

1) 중복제거 기준

### (가) 적합성 원칙 위반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57개 영업점에서는 2017.6.26.~2019.4.15. 기간 중 일반투자자 73명에게 << 사모펀드 73건 470.4억원 및 ㉡㉡㉡ 신탁 3건 13억원을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①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상향

- ☐☐☐지점 등 14개 영업점에서는 2019.3.8.~2019.4.15. 기간 중 일반투자자 14명에게 ◁◁ 사모펀드 14건 27.7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판매직원이 투자자정보 확인서 상 설문항목에 대한 답변을 임의로 작성 또는 전산입력하거나,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전산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성향 등급을 임의로 상향하였음

## ② 투자자정보 확인서 기명날인 누락

- ☒☒지점 등 46개 영업점에서는 2017.6.26.~2019.4.12. 기간 중 일반투자자 61명에게 ◁◁ 사모펀드 61건 452.8억원 및 ㉠㉠㉠㉠ 신탁 3건 13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 (나) 적정성의 원칙 위반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해당 파생상품 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 ㉠㉠㉠㉠㉠에서는 2017.7.25. 일반투자자 1명을 대상으로 ㉠㉠㉠㉠ 신탁 1건 5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 확인결과 적극투자형 투자자에게는 공격투자형인 ㉠㉠㉠㉠ 신탁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확인도 받지 아니하였음



## (다) 설명확인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지점 등 21개 영업점에서는 2017.8.28.~2019.4.3. 기간 중 일반투자자 24명에게 ◁▷ 사모펀드 25건 122.8억원 및 ㉡㉡㉡㉡ 신탁 1건 3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 (라)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등 36개 영업점에서는 2017.8.28.~2019.4.4. 기간 중 일반투자자 42명에게 ◁▷ 사모펀드 43건 204.2억원, ㉡㉡㉡㉡ 신탁 1건 3억원 및 교보 사모펀드 1건 40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마)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등 3개 영업점에서 2017.7.20.~2017.8.29.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3명의 직원이 일반 투자자 8명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 신탁 9건 27.2억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 나.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대리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 ○○○○○○ 등 23개 영업점에서는 2017.7.12.~2019.4.22. 기간중 (주)☆☆☆☆☆☆ 등 28명 명의로 금융투자상품 30건(특정금전 신탁 4건, << 사모투자신탁 26건), 226억 54백만원을 판매하면서, 명의인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의 기존 계좌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재복사하여 사용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등)에 의한 상품 가입시 대리인 위임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였음



## 관계 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문책경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문책경고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②~⑥ (생략)

- ⑦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5조의2(행정처분)** ①~② (생략)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가. 면직
  -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 다. 감봉
  - 라. 견책
  - 마. 주의
- ④ (생략)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우편
3.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②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파생상품등(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내용
2. 해당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
3. 해당 파생상품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③ 법 제4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53조(설명의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구조와 성격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4.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③ 법 제108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10.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28.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 □ 舊 「금융투자업규정」 (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 (1)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2)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29. 특정금전신탁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금전신탁 및 제20호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설명서에 갈음하여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하는 경우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가. 삭 제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부당행위의 중지 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营业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제2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 (4)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 (5)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6) 위법·부당행위가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중대한 내부통제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금융기관·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금융업관련법상 벌칙,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와 동시에 감독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으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별표 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 Ⅲ-5.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 1. 제재대상

① (유형 1)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일반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유형 2) 설명의무 불이행 (자본시장법 제47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는 행위
- 설명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 (유형 3)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1개월 경과후 재권유하거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권유 제외)

④ (유형 4)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51조, 제71조제5호)

-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 2. 제재기준

- 불완전하게 판매된 금액 또는 건수 기준 중 중한 기준으로 제재
- 기관제재시 투자권유대행인의 판매분을 포함 (투자권유대행인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 가능)



구분	판매금액·건수	제재양정		
		유형 1, 2	유형 3	유형 4
임직원	10억원 또는 50건 이상	문책경고(감봉) 이상	직무정지(정직) 이상	문책경고(감봉) 이상
	1억원 또는 5건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1억원 또는 5건 미만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기관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	기관경고 이상	기관경고 이상	기관경고 이상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	기관주의	기관주의	기관주의

주) 적립식으로 매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판매금액은 총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3. 가중 및 감경

- 투자자 수, 손실규모, 금융투자상품 규모, 위반기간, 회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위법 판매행위가 경영방침·판매지시, 기관차원의 부당한 광고 및 자료 등에 기인한 경우, 기관 및 관련 행위자(광고문안 작성자 등) 등에 대해 조치하고 판매임직원에게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친 영향, 위법행위의 정도와 동기 등을 감안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불완전판매행위 방지를 위해 자체감사 및 교육,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관에 대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기관에 대하여는 제재유형별 건수 및 금액을 합산하여 제재할 수 있다.
- 서로 관련 없는 다른 판매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되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보다 가중할 수 있다.
- 동일한 판매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 투자설명서를 미교부 하였더라도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조직적·반복적인 불완전 판매행위 또는 제재대상 유형 1, 2, 4의 경우 고위험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마목(1)~(5)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가중할 수 있다.
- 투자자 손실 발생이 없는 경우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은행과	일반은행검사국
연락처	02-2100-2663 02-2100-2982	02-3145-7062